

# 건설소식

## 주공, 올해 7만 9,071 가구 신규 발주

최저가 대상인 500가구 이상 55건 ...  
택지개발사업도 11건 예정

**주**택공사가 올해 총 7만 9,071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를 발주한다.

대한주택공사가 잠정 집계한 2009  
년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73건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11건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사업은 공구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신규공사는 100건이 넘  
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공사는 총 7  
만 9,071가구로 집계 됐다.

현재 착공 이후 올해 분양이나 공급  
이 예정된 주공아파트 9만 2,461가  
구보다 1만 3,000여 가구가 적은 수  
치이다.

주공은 이 가운데 1만 2,140가구를  
1분기에, 2만 7,470가구를 2분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1만  
8,241가구, 4분기에는 2만 1,220가  
구가 발주될 예정이다.

올해 주공 아파트 발주계획 가운데  
500가구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55  
건이다. 주공아파트 건설공사는 대개  
500~600가구가 넘으면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이들 공사  
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다.

이 중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  
설공사로는 △의정부 민락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평택 소사별 △  
성남 금광 △대전 노은 지구 등이다.

주공의 올해 택지개발사업으로는  
11건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5건에  
비하면 4건이 줄어들었고 시기도 모  
두 6월 이후로 잡혀 있다.

공사별 발주시기는 △군포 송정 △  
공주 송월 △진해 자은3 부지조성공  
사가 올 6월에 △시흥 목감 △시흥  
장현이 7월 발주가 예정돼 있다. 8월  
에는 △원주 태장 △고흥 남계 △마  
산 현동이, 9월에는 원주 흥업이 발  
주되고 연말에는 대구 연경과 광주  
효천1 부지조성공사 발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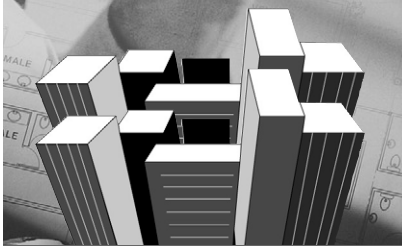
주공은 이 같은 발주계획을 2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정부의 조기집  
행 계획에 따라 발주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공이 이번에 집계한 발주계획은  
입찰공고 기준이 아닌 사업담당부서  
의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견적작업과 입찰준비 등의 기간을 거  
치면 실제 입찰공고는 1~2개월 이후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공사는 아직  
정확한 공사금액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주공은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공사비 집행이 약 9조  
9,000억원(계속공사, 신규공사 포함)  
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조원에 비해 10% 증  
가한 것으로 자재비 3,000억원도 포  
함된 것이다.

주공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원을 위  
해 상반기로 집행을 앞당기는 추세”



CONSTRUCTIONNEWS

라며 “재무적 현금흐름을 제외한 공사비와 자재비, 택지매입비 등 주공이 올해 실제 시장에 푸는 돈은 1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4조 3,000억원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신고자에 포상금 2,000만원 지급... 구청·SH공사 등 시행사업 대상

서울시는 3월부터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산하 기관의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중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5월부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신고자에게는 행위별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시와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 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로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하기로 했다.

시는 포상금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하도급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는 현재 주공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 중에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면계약서 작성 등 악성 불법하도급 행위는 적발이 어려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며 “공사참여자와 시민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관련 비리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했다.

### 10대 녹색기술 4년내 세계 10위권 진입

환경부, 4대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회’에서 수처리와 그린카 등 10대 환경기술을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970억원인 관련 예산을 2012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대 기술은 수처리와 그린카, 기후변화대응,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생물자원 활용·복원, 환경보전, 고효율 자원회수 등 7대 핵심기술과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 온실가스 대체물질,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등 3대 기

초원천기술이다. 지금 현재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 일자리, 생활공감 등 4대 분야와 온실가스감축, 10대 환경산업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 인프라 조성, 녹색인재 양성, 고품격 환경서비스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실천하는데는 올해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1012년까지는 17조5천억원이 투입돼 총 22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 기능공 1만6,978명, 민간훈련 통해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민간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능공 양성훈련과정에 대한 일반공모 결과 모두 87개 훈련기관에서 59개 종목 1만6,978명을 양성토록 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 민간훈련기관에서 양성하는 기능공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8개 직종 330명으로 가장 많다. 전문조합 기술교육원은 새해 건축목공 45명, 실내건축 45명, 건축시공 40명, 토목시공 40명, 측량 35명, 조경시공 40명, 특수용접 45명, 건축환경설비 40명 등을 양성하게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현대직업전문

학교에서 실내건축 30명을 비롯해 대  
신직업전문학교에서 건축시공 60명,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창조  
제작 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수원직업전문학  
교에서 건축시공 30명, 아주직업전문  
학교에서 건설기계운전 120명, 경문  
직업전문학교에서 건축환경설비 60  
명과 건축시공 80명을, 건설기술교육  
원에서 건축시공 60명과 건축환경설  
비 60명을 각각 양성하게 된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국제직업전문학  
교에서 조경시공 90명과 실내건축 80  
명을 양성하고 이외 광주지역에서  
280명, 대구지역에서 238명을 배출  
할 예정이다.

### 건설업도 사업전환 정책지원 포함

#### 중기청,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으 로 확대

**오**는 3월부터 중소건설업체도  
정부의 '사업전환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접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이나 환경사업에 진출하려  
는 전문건설업체 등이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사업전환 지  
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개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

별법'이 공포돼 3월부터 중소기업이  
라면 건설업체도 이용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3월 제도 시행에 맞춰 업  
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려면 지금부터 전환계획 수립 등을  
사전준비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전환 계획서  
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제2의 창업 수준의  
꼼꼼한 사전조사가 요구되는 만큼  
2~3개월의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독자적인 계획수입  
이 어렵다면 중기청에서 비용의 70%  
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받아 볼 것"을  
조언했다. 컨설팅은 중소기업진흥공  
단 사업전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전환지원내용은 융자,  
컨설팅, R&D, 정보제공, 유희설비 거  
래알선 등이다.

융자금의 경우 연 4.82% 금리(변  
동)로 시설자금은 30억원까지 8년간,  
운전자금은 5년간 5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기술개발비용은 과제당 1억원 한  
도내에서 75%까지 출연하며 이외에  
도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세제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사업전환 지원예산을 올해  
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억원 확  
대했다.

### 전문건설 하도급 노무비율 32%

#### 노동부 "전년대비 2%p 하락"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에서 노무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가 노동부 의뢰로 고  
용 및 산재 보험료 확정, 정산을 위해  
실시한 건설업 노무비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하도급 노무비율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설업  
은 28%다.

하도급 노무비율은 최근 3년간의  
전문건설업체 매출액, 노무비와 외주  
비를 기초로 산정하는데, 각 연도별  
노무비율은 2005년 35.51%, 2006년  
31.53%, 2007년 28.34%로 매년 감  
소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는 34%로 급증했  
고, 올해는 2%p 하락한 31.75%로 나  
타났다.

하도급 노무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공정이 자동화에 따른 투입인원  
의 감소와 재료비 물가상승폭 대비 노  
무비 상승폭의 둔화가 원인인 것으로  
물가협회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표본수가 작은 철도궤  
도, 철강재, 석도, 준설, 승강기 업종  
을 제외하면 미장방수조적이 52.91%  
로 가장 높았고 수증이 23.04%로 가

장 낮아 이 두 업종의 차이는 29.87%p에 달했다.

이외에 △도장 35.75 △철콘 35.62 △승강기 33.11 △토공 32.51 △석공 31.50 △상하수도 31.01 △포장 28.93 △비계 28.30 △철도궤도 27.75 △지붕건조 27.61 △금속창호 27.57 △실내건축 27.02 △삭도 26.50 △보링 24.71 △강구조물 24.62 △조경식재 24.38 △조경시설 23.95 △준설 15.12 △철강재 15.10% 순으로 높았다.

**원자재정보시스템 사이트 개설, 가격파악부터 거래까지 'OK'**

**건자재 등 매매 가능, 중기청 구축·운영**

**|** 건설자재 등 원자재의 가격동향 파악부터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정부가 구축 운영하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원자재의 가격 및 수급변동이 급변함에 따라 원자재 동향과 수급정보 모니터링 및 거래알선 등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 정보시스템' 사이트(www.wjj.go.kr)를 최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중기청이 주관해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니스사업처에서 운영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원자재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요 원자재 가격정보나 원자재 뉴스·시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자재거래장터를 통해 직접 원자재를 매매할 수도 있다.

메뉴로는 주요원자재가격 정보란에서 국제원자재가격정보는 물론 건설자재 중의 국내 원·부자재가격정보와 판매사가격정보까지 볼 수 있다.

원자재뉴스·시황에서는 뉴스나 시황과 함께 정부의 원자재나 중소기업 관련 발표 정책도 파악할 수 있다.

원자재거래장터에서는 직거래, 경매,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직접 판매와 입찰공고, 견적요청, 장바구니 등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판매사정보에서는 품목별로 판매회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켓플레이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구매도 가능토록 했고, 품목별로 커뮤니케이션카테고리를 제공, 업체간 정보나 의견 교환도 가능하다.

**산업현장 석면사용 전면 금지**

**개스킷·산업용 석면마찰제품 등 포함**

**|** 노 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

해 지난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금지 품목이었던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석면방직제품 등에 이더 석면개스킷제품(배관 연결 부위에 사용되는 개스킷, 패드 등),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돼 전면적으로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출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원재료는 물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사용 등 시중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수용이나 석유화학공업용 일부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사용금지가 유예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267개 항목 현장 적용**

**|** 올 해부터 가설공사 등 건설공사 표준품셈 267개 항목이 개정·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적정성 검토대상인 표준품셈 446개 항목 중 올해

제·개정 177개 항목 등 공사비산정기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총 267개 항목의 표준품셈을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되는 품셈 개정 항목은 가설공사, 방수공사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다.

특히 축중계, 재생플라스틱 울타리, 합성고분자 방수 등 재료 및 공법의 발전에 따라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목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품셈 개정작업으로 인해 비계, 동바리 등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장비의 대형화, 자동화 설비 등 기계화 작업형태를 반영해 현실화 되면서 현장 적용 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약 9%(방수공사) ~ 19%(가설공사)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편 품셈개정은 현장실사 및 심의를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해 연 1회에 그쳤으나, 작년부턴 건설현장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키 위해 개정주기가 연 2회로 늘어났다.

##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빨라진다

### 3월말부터 전담 위원회 신설... 건설사 비용 대폭 줄어

3월 말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갈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축 리모델링 추진 가능시기도 1~3년 빨라지고 주상복합 상가의 임시사용 승인요건도 완화돼 건설사의 자금 조기회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조정할 정부 산하 전문가 전담위원회가 신설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은 건설분쟁과 달리 별도 조정위원회가 없이 법적 소송만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갈등 해결에 수년 이상이 걸렸다. 국토부 집계에 의한 아파트 하자소송 신청건수는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545건이고 아직 27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고 3월 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 입주자, 건설사 간 하자분쟁에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입해 단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비용, 시간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중축 리모델링 허용요건이

현행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에서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으로 개정된 점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축 리모델링 추진 가능시기가 최소 1년에서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등 부분 완공 때 임시사용 승인도 새롭게 허용한다.

이는 상가 부분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승인이 안 돼 상가 분양마저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50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완공된 지하 3층, 지상 5층 이내의 상가 사용을 임시로 승인함으로써 건설사들이 상업시설을 조기분양해 투자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토록 했다.

또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때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2일로 대포고 단축했으며 공동관리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탁,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 지난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 가스공사 올해 2조원대 신규 발주

삼척기지 9500억원 공사 대기 등 작년보다 140% 늘어

**한** 국가가스공사가 올해 삼척기지 부지조성공사와 탱크 4기 건설공사 등 총 238건, 2조410억원 규모의 신규공사를 발주한다.

가스공사가 집계한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설비 신증설 및 개보수, 배관공사 등 2조원을 웃도는 신규 공사가 발주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작년 공사물량인 8,475억원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삼척기지 건설공사와 천연가스 공급 확대 배관망 건설공사 등 신규 공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모두 94건, 2,388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된다.

당초 지난해 발주 예정이었던 통영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775억원)를 비롯해 △생산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1,108억원) △평택 LNG탱크 내부점검 및 보수공사(40억원) 등이 1분기에 집행된다.

이어 2분기에는 96건, 8,302억원의 신규공사가 대기하고 있다.

예산액 6,250억원의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와 1,710억원 규모의 제4기지~영월 주배관 건설공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목감관리소 증설공사(70억원) △포스코파워 복합화력 가스공급 시설 건설공사(60억원) △평촌~백현 배관이설공사(32억원) 등의 중소규모 공사도 2분기 집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척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한다.

총 34건, 1,307억원의 공사발주가 예정된 가운데 1,260억원이 책정된 삼척기지 부지조성 공사가 3분기 안에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

4분기에는 14건, 8,413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된다.

특히 4분기에는 올해 가스공사의 신규물량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척기지 저장탱크 4기 및 본설비공사(8,229억원) 발주가 예정돼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발주규모가 전년 실적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삼척기지 건설과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을 위해서만 1조5,7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상식

###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담배 연기에는 카드뮴 외에도 비소(개미 살충제), 부탄(점화액), 일산화탄소(배기가스), 청산가리(취약), 포름알데히드(시체 방부제), 암모니아(세척제) 등 온갖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흡연이 일으키는 암도 폐암에서 그치지 않는다. 구강암, 인두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자궁암 등 무려 8가지 암을 유발한다. 고질병에 걸리기도 십상이다. 흡연자들은 폐결핵과 폐렴, 기관지염, 독감, 폐기종,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 질환에도 취약하다. 흡연자 가족과 직장 동료들도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다. 선진국에서 공공장소의 금연을 법제화한 데 이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의 흡연까지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흡연이 흡연자들에게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일지 모르나, 비 흡연자들 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관계된 문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 사전」 중에서